

## 트럼프 ‘희토류 블록’ 中 독점 판 뒤엎는다

美, 핵심광물협업체 ‘포지’ 출범  
벤스 “경제적 광물시장으로” 中 겨냥  
동맹-우방국 중심 55개국 참여 추진  
韓, 의장 맡아… “공급망 MOU는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심광물의 원활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새로운 무역블록 구축에 나섰다. 이 블록은 전 세계 희토류 정제의 90% 이상을 독점해 온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동맹·우방을 규합해 핵심광물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다. 이에 사실상 강도 높은 ‘대(對)중국 경제 봉쇄’란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 시간) J 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핵심광물 시장을 더 건강하고 경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매커니즘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핵심광물을 위한 ‘우선 무역지대(preferential trade zone)’”라고 표현했다. 중국이 핵심광물 가격이나 공급 통제에 나서는 걸 막기 위해 참여국 간 현실을 반영한 기준 가격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우리는 광물 공급망을 통제하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종속된 상태가 됐다”며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미국은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협의체인 ‘포지(FORGE·Forum on Resource Geostategic Engagement·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 이니셔티브’의 출범도 공식화했다. 포지 이니셔티브는 한국, 미국,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해 온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후속 기구 성격이다. 미국은 포지 이니셔티브에 동맹·우방국을 중심으로 55개국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MSP의 장국인 한국은 6월까지 포지 이니셔티브 의장국을 수입할 예정이다. 향후 핵심광물 무역블록 구축과 관련된 논의가 포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도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외교부는 “주요 7개국(G7), 포지 회원국 및 주요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 미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제안했고, 무역블록 구축 작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련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가운데, 이에 동참하는 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이윤태 기자

▶A3면에 관련기사

## 與 “보완수사권 없애고 요구권만 부여”… 정부案에 반기

의총서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총장 아닌 ‘공소청장’으로  
중수청 수사관도 분리 않고 일원화”

정부 “집권여당이 할 일인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

청법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안에서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보완수사권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미뤘지만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날 의총에선 이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된 만큼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 버리면 되나”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 등의 규정을 만들면 위헌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수청은 수사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지 않고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정부안에 담긴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삼권분립에 의해서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무적 리스크를 지면서 얘기한 것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게 집권여당이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A5면에 관련기사



겨울바다 뚫고… 해군 특전요원 혹한기 훈련 해군 특수전전단 특전요원(UDT/SEAL)들이 강원 동해안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의 일환으로 해안 침투 훈련을 하고 있다. 5일 해군은 특전요원들이 2일부터 11일까지 동해안과 산악 일대에서 2026년 혹한기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군 제공

## 與 대외비 문건 “조국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

흡수합당 모델 삼아… 논란 일듯  
‘3월3일까지 합당’ 시간표도 담겨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시 일정과 방식에 대한 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는 조국혁신당 측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2021년 열린민주당과의 흡수 합당을

모델로 삼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 용지 7장 분량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요 협상 쟁점으로 지도부 구성 논의를 꼽았다. 문건에는 “현 지도부 승계 범위 및 통합 지도부 내 조국혁신당 측 배분 비율(지명직 최고위원 등) 합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대표를 두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2014년 신설 합당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창당 준비 중이던 새정치연합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신설 합당했다. 반면 2021년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의원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민주당에 흡수됐다.

문건에는 또 이달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합당 시간표가 담겼다. 반청(반정청)에 인사는 “사실상 합당 계획을 정해 놓고 제안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핵심 당직자는 “실무자가 만든 것으로 대표나 최고위에 보고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A5면에 관련기사

## 장동혁 “사퇴 요구하려면 의원-단체장직 걸어라”

“오늘까지 요청면 바로 전당원 투표”  
친한계 “재신임 발의권 무력화 협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제기된 사퇴·재신임 요구와 관련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로 직책을 걸고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당원에게 묻자는 것. 친한(친한동훈)계는 “협박 행위”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이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

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비판을 ‘입찰’ 하겠다는 협박”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참 실망스럽다”며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은 “(재신임 투표) 발의권을 공갈 협박으로 무력화하려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장동혁은 더 이상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오늘부로 파소 등극”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A4면에 관련기사

軍, 유엔사에 “DMZ 남측 철책 이남 관할권 달라” 공식 제안

A6면

# 올 설에도 정관장으로 말해요

## 설사은행사

2026. 01. 23 ~ 02. 18

혜택 1

전 품목 10% 할인  
※ 뿌리삼(천삼) 등 일부 품목 제외

혜택 2

신규가입 시, 천복돈 3포 증정  
※ 마케팅 수신 동의 필수

혜택 3

삼성카드 LINK 20/50/100만원 이상 결제 시,  
1/3/7만원 청구할인  
※ 로드샵 및 정물 한정, 1인 1회, 법인/체크/선불/충전 기프트카드 제외

JUNG KWAN JANG 정관장